

승용차 도심 진입 규제 철도·버스 어우러진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을

6·13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번엔 해결을

<4>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 구간 확대하면 건설비용 대폭 줄어듭니다

연장 41.9km로 광주 전체를 순환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선진국 대도시의 공공교통시스템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와 승용차 중심의 삭막한 광주를, 다양한 디자인·규모의 건축물과 도시철도, 버스 등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기계적인 찬반 논란에서 벗어나 2호선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대도시 광주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동시에 승용차의 도심 진입 및 이용을 규제해 매연 감축, 교통약자 편의성 증진 등을 꾀하는, 보다 성숙한 논의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 6기에서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 여부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민선 7기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선진화된 건설 방식, 시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은 총 사업비 2조579억원을 들여 우선 1단계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정거장 20개소·차량기지 1개소) 17.06km를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이후 2단계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윤남지구~시정(정거장 18개소) 20km는 2024년, 3단계 백운광장~진월~효천역(정거장 6개소) 4.84km는 202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2조579억원 가운데 국비(60%)가 1조 2347억원, 시비(40%)가 8232억원이다. 시는 2호선 사업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4

년까지 65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9435억원인 채무액이 2024년에는 1조22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상황의 악화로 다른 대규모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진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32.4km(사대전역~가수원역)을 건설하는데 548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3.75배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 같은 차이는 광주가 승용차 소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하 방식을 선택한 반면 대전은 현재의 간선도로 위에 노면전차(tram)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노면전차는 건설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 수요에 의해 노선 변경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도시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해 유럽·미국·일본 등 150여개의 선진국 도시들이 수십년 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가 2호선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노면전차에 대한 관련 법률의 미비로 국과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등의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전시는 KDI 타당성 제초사를 거쳐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도 노면전차의 적용 확대를 검토, 소오 예산의 절감, 승용차 이용 감소에 따른 미세먼지 및 매연 감축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 9.6m를 파야 하는 일반 지하구간이 28.2km로 가장 많고, 6.3m를 파는 지하박스형구간이 9.5km, 이어 지상구간은 4.2km로 가장 적다. 지상구간은 신가4거리~하남대로 1.5km, 고속도로~수완지구 1.2km, 첨단대로~첨단롯데마트 1.0km, 차량기지~유택2교차로 0.5km 등 도시 외곽에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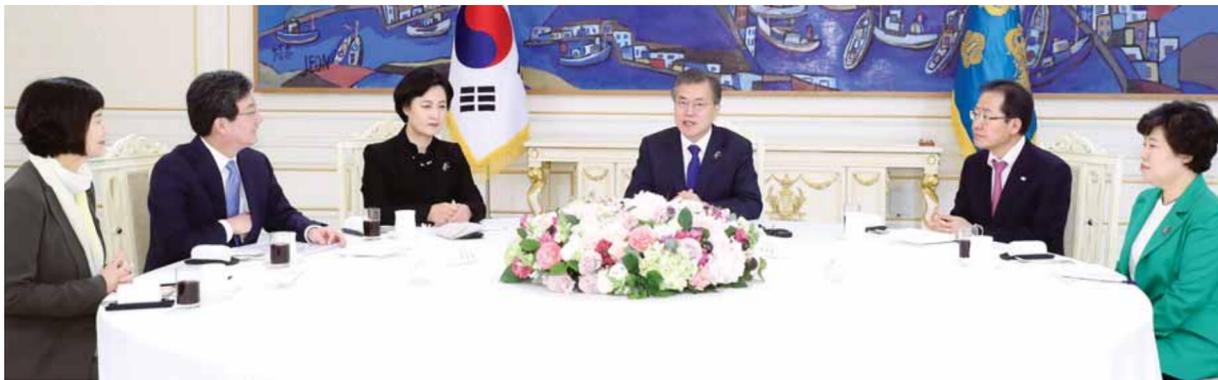
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2호선의 안전성,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자동차 중심의 현재의 교통체계를 바꾸지 않고는 도시철도 2호선의 전방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전시의 노면전차 도입을 민선 7기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선거 누가 뛰나-해남군수 ▶5면

그림 편지-독일에서 김유섭 ▶18면



문대통령-5당 대표 ‘청와대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합뉴스

문대통령 “목표는 北 비핵화... 제재완화 불가능”

5당 대표와 오찬회동 홍준표·유승민 날선 질문 문대통령 조목조목 반박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 “(북한 측과) 국외에서 따로 비밀 접촉한 것은 없으며 남북정상회담 제안도 베를린 선언부터 시작한다 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대북 접촉을 국내에서 했느냐 해외에서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홍 대표의 언급에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지만 ‘다 안 될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할 일도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제재·압박이 중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의견에 문 대통령은 “튼튼한 국제적 제재 가운데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이뤄지고 거기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제재가 완화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임의로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로 정한 것은 누구냐’는 홍 대표의 질문에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6월 지방선거로부터는 간격을 뒤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

고, 4월 말 정도가 좋다고 한 것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북특별사절대표단 수석 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내 정치와 관련해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김여정 특사가 문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에 평양 방문 요청을 했고,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대북특사단이 북쪽의 일방적인 구술 내용만 발표한 것 아니냐”는 홍 대표의 지적에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진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필요하며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불가능하다’ 등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검토는 위원장의 입장을 특사단이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라며 “체대로 우리가

제시했던 부분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 폐기가 아닌 동결식으로 가면 국가적 비극이 올 수 있다”는 홍 대표의 언급에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며 핵확산 방지나 동결 정도가 아니다”라며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 완전한 폐기에 이르도록 합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면 개헌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 국회가 속도를 좀 내 달라”며 여야 5당 대표에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열망’ 국회에서 분출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 노사민정 손 잡았다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의 뜨거운 열망이 국회에서 분출됐다. 광주일보 등 9개 전국 유력 일간지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토론회에는 한신협 소속 8개 신문사 발행인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 지방분권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가늠해 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고, 당내 사정으로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분권과 상상’을 약속했다.

특히 김부겸 장관은 축사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헌법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피로감만 확대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발제 후 민주당 김영진, 한국당 정종섭, 바른미래당 이태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 각 정당과 학계의 헌법·지방분권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영정상화 위한 역할 다짐

금호타이어 문제, 광주형일자리 등 광주지역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광주시가 한 자리에 모였다.

광주시는 7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 매각 방침과 관련해 향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다짐하고 또 빛그린산단 내 적정임금 실현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으로 광주형일자리를 실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윤장현 시장)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 상반기 분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미 광주시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 위원 20여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해 광주형일자리와 금호타이어 문제에 대한 지역 여론을 들었다. 문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위원회 회의에 두 번이나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석자들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뒤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금호타이어 노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또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친환경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로 통해 광주공동체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끝나지 않은 열정,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막
■기간: 3.9~3.18 ■장소: 평창/강릉/정선
올림픽으로 하나된 열정,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이어갑니다!

올림픽 특별 콜센터 1330
Passion.Connected.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PARALYMPIC COMMITTEE